

일반식당 → 한정식집 → 가정까지 중국산 김치 식탁 점령

수입량 급증 ... 국산 둔감해 잠식

중국산 수입김치가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일반식당은 물론 전통 한정식집에 이어 일반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감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산과 비슷한 수급종의 중국산 상품을 싼값에 내놓고 있어 국내시장 잠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김치 원산지 표시나 수입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 중국산과 차별화된 김치상품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농림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22만7천977t에 달해 2002년 1천41t에 비해 무려 212배나 늘었다.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002년 1천41t→2003년 2만8천707t→2004년 7만2천605t→2005년 11만1천459t→

2006년 17만7천960t→2007년 22만797t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입량은 2006년 1천776t에서 2007년 2천626t으로 48% 증가했다.

더욱이 2006년 이전까지 중국산 생김치와 목은 김치 정도만 유통되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 말부터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전라도식·경기도식 등으로 김치맛을 차별화한 40여종의 상품을 선보이며 영역을 넓혀가는 상태다.

실제로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올초 소비자 패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산인지 알고 김치를 구매한 소비자는 2005년 4.3%, 2006년 10.8%, 2007년 14.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2005년 ‘김치 파동’ 이후 중국산이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온데다, 가격(1kg 1천200~1천500원)도 국산

보다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 불과해 찾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국 수입량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김치소비량(30kg)을 계산할 때 10%를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산 수입 김치가 맹위를 떨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김치업체들도 고전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33개 업체 가운데 3개소가 이미 문을 닫았고, 2개소는 타지역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업체들도 대부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A 김치업체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입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학교급식과 병원·대형음식점 등의 국산김치 이용 의무화, 차별화된 상품 생산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자전거 타기 운동' 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구입해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광산구처럼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거나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정책을 펴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美 쇠고기 고시 무효
10만명 憲訴**

국민 10만명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협상과 지난달 있었던 장관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민변은 고시가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결과를 초래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모든 검역권을 미국에 내주고 우리 주권을 포기해 결국 고시 무효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버스 비수익 노선 30% 감축
전남 시·군 '교통 대란' 우려**

운송조합, 유류세 전액 환급 등 요구

전남 버스운송조합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내달 중 비수익 노선의 버스 운행을 30%까지 줄이기로 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4일 전남 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국 17개 버스운송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버스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버스 업계의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선 비수익 노선에 대해 30% 감회 운행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택시 LPG 면제 조치와 같은 유류세 전액 환급 ▲유가 인상분 반영 이달 중 운임 인상 조정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자율적 감회·단축 운행 ▲향후 유가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남도내 26개 시·군에서는

대당 운송수지 적자가 월간 400만원에 이른다”며 “운행하면 할 수록 적자인데 누가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겠느냐. 정부가 버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회·감차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버스업주가 감회 또는 감차를 원할 때 민·군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감회·감차를 할 순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유망학원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쇠고기 해법 '민간 주도 3단계' 가닥

정운천 장관 “국민 믿을 때까지 검역 중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을 민간주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협상을 접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의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 “미국 쇠고기 수출 업계의 월령 구분 표시(라벨링)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국내업체의 결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업체의 결의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1단계 조치인 월령 구분 표시는 카질과 타이 스푸드 등 미국의 유력 5개 업체가 120일을 시한으로 30개월령 구분표시 방침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 전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2단계 조치인 국내 수입업체들의 자율결의는 현재 한국수입육협회의(가칭)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3단계 조치인 30개월령 이상 수출

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결의는 이 해법의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러한 3단계 과정에서 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 외관상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 주도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농수산물식품부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검역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왔고, 향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겠다”면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최고(39)층 명품아파트 구역지정 확정

입동 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문의전화 : 521-3082~4

(주)아이엠에스 (주)대신건설